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노후 공동주택 빈집 활용 대책 절실”

조동용 의원 “도내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약 20%가 빈집상태”

도내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총 396단지 2만9694호에 달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이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빈집실태조사 및 관리활용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용 의원

2018년 기준 전북도 빈집실태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총 9,763호로 이중 20.5%는 도심지역에 79.5%는 농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26일 제36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는 도내 주택유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빈집실태조사 실태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3,946호를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 40년 미만

빈 공동주택 3673호 중 13%인 490호가 빈집상태였으며,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73호 중 24%인 67호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과도한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 인구감소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빈집실태조사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도 빈집관리활용계획에서도 공동주택 빈집대책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빈집의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실태조사

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지역의 성격과 주택의 유형별로 적합한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 빈집관리활용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주시가 빈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렇다고 정부가 선뜻 나서지도 않아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조 의원은 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는 정도로 빈집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전북도가 관련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우선 진행시켜 공동주택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욕 순방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

뉴욕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원에 도착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도의회 청렴교육

제11대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문승우 위원장, 군산)는 최근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라북도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6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 7월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회 차원의 청렴 역량 강화로 의원들 스스로 실천의

지를 다지고 전북도의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 청렴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와 사례분석’을 주제로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김정현 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김정현 소장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자세한 강의와 함께 공직자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승우 윤리특별위원장은 “청렴은 의원들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북도의원 모두가 의원활동 중에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도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의회는 최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원·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공무원, 본인 업무에 무한 책임의식 가져야”

박용근 의원 “정책결정 등 과정서 발생한 손해 책임 안져”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이 26일 열린 제36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에 무한한 책임의식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선출직인 도지사 와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추진된 많은 사업들은 결과가 잘못되었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거나 행·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거의 책임

을 지지 않는다”며 과거의 2009년 ~2010년 진행되었던 새만금투자관련 MOU를 사례로 들며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투자결정이라는 것을 알고도 진행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전 지사가 재선을 앞두고 사실상 ‘사기성 MOU’를 진행했다며, 그러한 MOU를 기획했던 담당공무원이 지금도 도청 요직에 있다며 책임지는 공무원의 모습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또 “현재 형식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실명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사와 교육감의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MOU 체결등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들에게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당정 “전국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실시”

유은혜 교육부장관

“부모 힘에 자녀 입시 뒤바뀌는 일 용납 안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시에서 학생 부종합전형(학종) 출력이 두드러진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11월 중 내용을 방침이다.

민주당 교육정책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교육정책강화특별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이날 교육부와 상례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으로 학종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간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종 비교과영역, 자소서 등 현재 대학 입시 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다만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

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신속 조사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당 특위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특위와 시도교육청 대학팀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사회관계 장관회의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 미래교육을 위한 긴 호흡으로 단기와 중장기 로드맵 구성하며 제도 개선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부모 힘으로 자녀의 학과

간판이나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부모 힘으로 자녀의 입시·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한 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진학과 대학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교육정책강화특별위는 박경미·조승래·신경민·도종환·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박재원 행복한국교육연구소 소장·유성상 서울대 사회학 교수·정명재 세종대 교수·이찬규 중앙대 공과대 교수 겸 전 입학처장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다. /뉴스

제3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합창 경연대회

2019. 10. 5(토) 오후 4:00

전라북도청 대공연장

- 주최 : 전주매일신문,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